“합리적 컨트롤타워” 지지성명… 중기부, 이번주 새 수장 맞나?

〈박영선 후보자〉

“중기 정책 뚜렷한 추진력 겸비”
중기부 노조·금융산업노조 등
즉각 임명 촉구 입장문 잇따라
오늘 장관후보 임명 단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주 새 수장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유관단체, 각계 노조의 ‘임명 촉구’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시한이 일요일인 7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8일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10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해야하기 때문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등 노조를비롯해 소상공인정책포럼, 한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유통물류프랜차이즈리더스포럼·중소벤처포럼 등 학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이 ‘즉각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냈다.

중기부 노조는 성명에서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견디면서 강력한 대변인을 바라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박영선 후보자가 조속히 장관에 임명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장관 후보자가 직원들에게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에 국민들이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박 후보자는 의정활동 내내 경제적 강자들의 약탈적 횡포에 맞서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 왔으며 중소기업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포용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며 임명을 요구했다.

기보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재벌대기업 저격수로 중소기업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섰던 박 후보자야말로 중소기업의 애환을 달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혁파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등 19개 단체도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 단체들은 박영선 후보자를 지지한다”며 “하루속히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돼 우리를 보듬어 주는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여야 정치권은 청문회장에서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관한 질의는 생략한 채,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더는 박 후보자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등 3개 단체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서 정파 간 논쟁에도 불구하고 중기부 장관의 임명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여성경제인협회와 여벤협은 박 후보자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재한 중소기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여성 중소벤처기업계는 여성 장관이 임명될 경우 여성 고용 촉진과 여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495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올해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49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다.

중기부는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창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2년부터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비즈쿨 운영학교로 선정되면 기업가정신 교재, 창업동아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체험활동비, 전문가 강사비 등으로 학교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점 비즈쿨 운영학교로 선정된 14개 학교는 기업가정신 캠프, 각종 체험과 실습프로그램, 경진대회 등을 실시한다. 캠프에서 우수 참가자로 선정된 학생은 해외 탐방 기회도 갖게 된다.

올해 예산은 76억원으로, 교육 대상은 50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가정신은 창업을 위한 기술이나 경제적 지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도와 가치, 문제해결 역량 등이 결합된 것으로 비즈쿨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 명단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항생제 소비, 여전히 OECD보다 크게 높아

인구 1000명당 32명 매일 사용
전년보다 감소… 평균比 1.63배

국내 항생제 소비량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사용량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항생제 소비량은 32.0DID(1천명당 하루 의약품 사용량)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32명이 항생제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생제 소비량은 2016년과 비교해 8%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19.6DID)의 1.63배에 달했다.

국내 항생제 소비량은 2017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소비량은 2009년 26.9DID, 2011년 29.1DID, 2013년 30.1DID, 2015년 31.5DID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6년에는 껑충 뛰어 34.8DID로 기록했다. 2017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이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항생제 소비량이 집계된 OECD 국가 12개국(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OECD 국가 간 비교와 국내 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해당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있다. 2017년 통계는 이달 1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2017년 OECD 12개국 항생제 소비량〉

한국	32.0
아이슬란드	23.8
룩셈부르크	23.4
포르투갈	22.5
이탈리아	21.5
이스라엘	21.2
노르웨이	17.9
칠레	17.1
캐나다	15.0
헝가리	13.7
에스토니아	13.5
스웨덴	13.3
OECD 평균	19.6

“CU택배, 집 앞에서 바로 접수”
론칭 3개월만에 이용 3배 ‘껑충’

오피스 입지 이용비중 가장 높아

CU가 편의점 택배 전문회사 CUpost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한 ‘홈택배 서비스’ 이용 건수가 서비스 론칭 약 3개월만에 3배 이상 크게 신장했다.

7일 CU에 따르면 지난달 홈택배 이용 건수는 지난해 12월 대비 무려 3배(212.7%)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이용 건수 역시 도입 초기 대비 약 2.5배나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홈택배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편의점을 찾아가 택배를 맡겨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고객이 직접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송 기사가 방문해 물품을 픽업한 후 인근 CU에 택배 접수를 대행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수도권 일부에서 테스트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역삼, 광화문 등 오피스 입지의 이용 건수 비중이 약 30.5%로 가장 높았으며, 신림, 노량진 등 독신자주택 입지의 이용건수 비중도 18.8%로 높게 나타났다. 목동, 창동 등 아파트가 밀집한 가족주택 입지가 10.3%로 그 다음을 이었다.

부재 중인 시간에 픽업을 원하거나 무게나 부피 때문에 혼자 운반이 어려운 물건을 배송하고 싶은 1인 가구,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편의점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택배 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대법 “태아보험, 분만 중 의료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현대해상 확인소송 상고심 ‘패소’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을 체결했다면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신생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관에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보험이 개시된 이상 출상 전이라도 우연한 사고로 상해을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임모씨는 임신 초기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듬해 1월 병원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었고 임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현대해상 측은 ‘해당 보험계약은 임신 중인 산모를 위한 것’으로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입은 상해를 보장하는 것인데 의료사고는 ‘우연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이에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임씨가 의료행위에 동의했더라도 아이가 영구적 시각장해에 이르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현대해상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재판을 끝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